
국민이 체감하는 **교육혁신**
미래를 주도하는 **인재양성**

2020. 3. 2



교육부



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	4
1. [포용]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	5
2. [혁신]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	9
3. [공정] 교육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...	16
4. [미래] 미래교육시스템의 선제적 준비	19
5. 추진전략 : 소통, 협업, 과학화, 규제혁신	22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24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2019년 추진성과

□ 교육의 공공성 강화

- (유치원) ‘유치원 3법’* 통과(‘20.1)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, 모든 유치원 ‘처음학교로’ 참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
 - *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, 에듀파인 의무화, 학교급식법 적용 등
- 국공립 유치원을 지속 확충하고, 현장 수요가 많은 통학버스* 운영 확대 및 맞벌이 자녀 등 대상 오후 돌봄 서비스** 보장
 - * (‘18) 1,182개원 1,344대 → (‘19) 1,461개원 1,871대 / ** 참여 유아(‘19.4) : 144,072명(전체 중 81.2%)
- (고교 무상교육)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(‘19.4) 및 법적근거(‘19.12)를 마련하고, ‘19년 2학기 고3 학생 47만 명에게 도입
 - ※ 연평균 약 160만원 수혜, 가계당 월 13만원 가처분소득 증대
- (교육급여) 저소득층 초·중·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급액을 최저교육비 100% 수준으로 인상
 - ※ [초등] (‘18) 116,000원 → (‘19) 203,000원 [중·고] (‘18) 162,000원 → (‘19) 290,000원
- (대학생 학비) 전체 대학생 절반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(109만명, 47.3%), 등록금 절반(368만원) 이상 수혜자도 68만명 이상(31.5%)으로 확대
 - ※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: (‘18) 기준중위소득 120%, 66.6만명 → (‘19) 130%, 68.3만명

□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추진

- (교육부 혁신)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신설*(‘19.1)하고,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사립 초·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(‘19.12)
 - * 중대한 교육비리에 대해 신속한 조사·감사 및 제도개선 추진
- (조사·감사) 사립대 종합감사*를 확대(‘19. 6개교)하고, 시민감사관 도입(‘19.7) 및 유관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
 - *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 예정(~’21)
- (제도개선) 학교운동부 (성)폭력 근절방안(‘19.1),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(‘19.3), 사학혁신 추진방안(‘19.12)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·추진

□ 교육제도 변화 방향 수립

- (고교체제 개편) '25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,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여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추진('19.11)
- (대입제도 개선) 수능위주전형 확대,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고,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 착수('19.11)
- (고등교육 혁신)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확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추진하고, 미래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
※ 대학혁신 지원방안('19.8), 전문대학 혁신 방안('19.12), 미래사회 첨단분야 인재 등 양성방향('19.11)

아쉬운 점

□ 교육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

-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, 대학 혁신, 일반고 역량 강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나,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부족
- 교육 변화 방향에 대한 교육현장, 정책 당사자,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부족했으며,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 제기

□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 속도 부진

- AI·신산업 등 새로운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,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미흡
- 학령인구 급감, 에듀테크, 교육수요 다양화 등에 맞춰 교수·평가방법 혁신, 교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추진 속도는 부진

□ 교육 및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끄는 거버넌스 구축 미흡

-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, 국가교육위원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및 공감대 부족
-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, 사회제도 개혁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부족
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□ 인구구조, 산업·고용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

-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, 빠른 고령화로 국가 인적자원 감소
※ 학령인구(만명) : ('10) 735(총인구 14.8%) → ('19) 554(10.7%) → ('25) 509(9.8%) → ('30) 426(8.2%)
65세이상(만명) : ('10) 537(총인구 10.8%) → ('19) 769(14.9%) → ('25) 1,051(20.3%) → ('30) 1,298(25%)
-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및 일자리구조 재편
※ '35년까지 전문과학기술, 전기·전자, 기계,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중심 취업자 증가 및 고숙련 직업군 취업자 큰 폭 증가 예상('19. 고용정보원)

□ 사회문제의 다양성·복잡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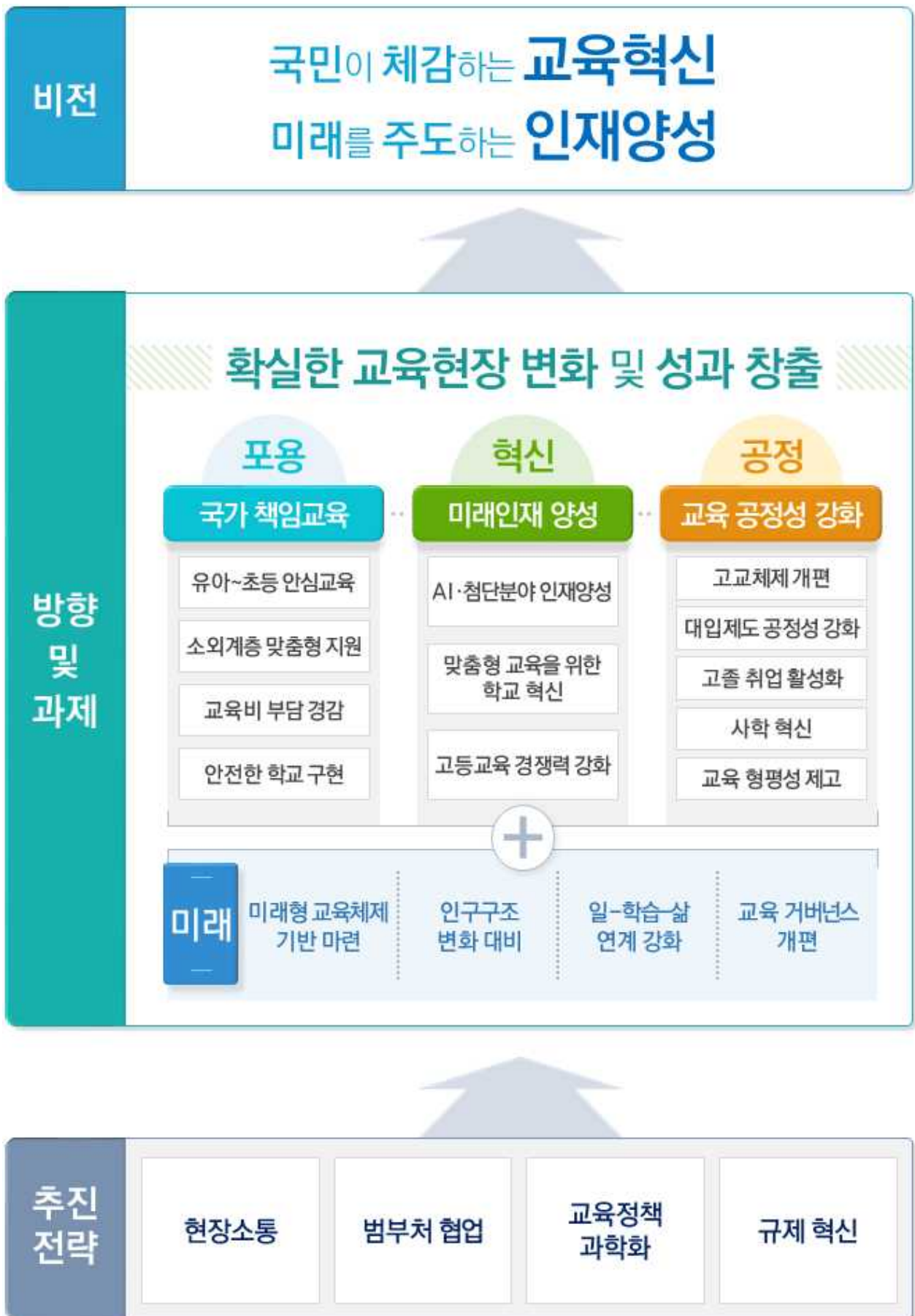
- 사회구조 급변에 따라 교육, 고용, 복지, 문화 등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 증가

2. 업무추진 방향

- ❖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·보완을 통해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,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
- ❖ 인구구조 변화,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, 사회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로 사회제도 개혁 추진

- (국민 체감) '포용', '혁신', '공정'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10대 핵심 과제* 중심으로 교육 정책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고, 현장소통 강화
*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, 민주시민교육 활성화, 고교 서열화 해소, 일반고 역량 강화, 고교학점제 추진, 학교공간 혁신, 대입 공정성 강화, 사학혁신, 대학·전문대학 혁신, 고졸 취업 활성화 등
- (미래 준비)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동력 창출
- (범부처 협업) 사회부총리로서 중장기 정책 의제 발굴 및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 체계 공고화
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

1 [포용]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◇ “함께 잘사는 나라”를 위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해소 필요

☞ 유아부터 청소년, 대학생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, 더욱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

□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 구현

○ (유아) 모든 사립유치원에 ‘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’을 전면 도입하고, 건강·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‘학부모 안심유치원’ 전국 확대

* 강화된 건강·안전 분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유치원 / (‘19) 10개 시도 → (‘20) 17개 시도

- 국·공립유치원 취원율 40% 달성을 목표(‘21)로 500학급 이상 확충 및 매입형, 부모협동형 등 설립 유형 다양화

※ (매입형) 사립유치원 매입 → 공립 전환 / (협동형) 부모들이 결성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

- 방과후 과정 확대(‘20. 9,721학급), 돌봄시간 다양화, 초등·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 등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, 단계적으로 통학버스 확충

- 유아·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(‘20.3 전면 적용)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, 이와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을 ‘놀이와 쉼’ 중심으로 운영

※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, 놀이 이해자료, 놀이 실행자료, 놀이 운영사례집(5종) 보급(‘20.2)

○ (초등) 입학 초기 적응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등 1학년을 ‘학부모 안심학년제’로 운영하여 학습·안전·돌봄 영역 책임 지도

-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*으로 학습손실을 예방하고,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두드림학교**를 통해 저학년 집중 지원

* 교사, 교원자격소지자, 교·사대생 등 활용 / (‘20) 800개교 → (‘21) 1,000개교

** 담임·상담교사 등이 다중지원팀 구성 / (‘20) 2,900개교 → (‘21) 3,500개교

- 읽기·쓰기·셈하기 등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*(‘20~), AI·게임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콘텐츠 보급(‘20.9~) 등 기초학력 책임 교육

* 매년 초등교원 15% 이상 15시간 직무연수(한글문해력, 기초수학 등) 실시

- 등·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옐로우카펫 등 식별 용이성 강화*, 학교 내·외 보행로 확보

*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CCTV 2,087대, 신호등 2,146개 우선 설치('20.上~) /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등 식별 용이성 강화 시설 초등학교(100교) 시범사업('20.下~)(행안부·경찰청 협업)

<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예시>



- 기존 교실을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*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,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·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**

* 바닥난방, 교실내 개수대, 실내인테리어 개선('20.下~, 1학년 교실 50% 우선 목표)

** 교과별 놀이연계 수업자료(10종) 개발·보급, 저학년교사 맞춤형 연수 실시('20.下)

- 돌봄 수요가 높고 공간개선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제공*,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최소화

* ('20.下) 돌봄수요·대기자가 많은 학교 시범 실시→ ('21~) 지역·학교여건에 따라 단계적 확대

※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통한 문화예술 방과후 콘텐츠 특화 및 소외계층 지원 강화

- (온종일 돌봄) 초등 돌봄교실('20. 700실), 마을돌봄기관('20. 430개소) 확충, 신규 돌봄모델 발굴·확산* 등을 통해 42.5만 명**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

*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이용 등을 통한 지자체-학교 협업 모델 개발('20.上)

** '돌봄서비스 연차별 확대계획('18.4)' 목표치('20. 40.8만 명) 상회

- 부처별 분산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 안내·신청 시스템을 통합('20.下) 하고, 아파트 단지·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 확충

- 근거법 제정*, 업무매뉴얼 및 온종일 돌봄 기관 인력·시설·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지역·기관 간 돌봄서비스 편차 완화

* 「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·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

□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기회 보장

- (기초학력 지원 학생)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정, 진단-보정시스템 활용성 제고*, 교·사대 교육과정에 기초학력 교육 내용 포함 등으로 지원 강화

* ('19) 교육청별 지정기간에 진단 → ('20) 기간에 상관없는 진단 기능 추가

- (장애학생)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('20. 1,398명)하고, 특수학교 4개교,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 확충
 -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시스템*을 구축(~'20.9)하고,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** 및 '장애인 평생학습도시' 지정·운영('20. 5개 지역)
 - * 장애학생의 직업평가, 직업교육, 고용지원, 사후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
 - **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(500명), 인턴십 일자리 확대(2,600명), 장애 대학생 진로·취업 지원(1,000명) 등
- (다문화학생 등)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및 특정학교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해 학교 배정 방식 개선('20.下)
 - ※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시 : (현행) 학교장이 입학 허가 결정 → (개선) 교육장이 학교 배정
 -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학급* 및 한국어능력 진단·보정 시스템 적용 확대**,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모델 개발(650개교)·확산
 - * 한국어학급 수 : ('18) 223학급 → ('19) 327학급 → ('20) 약 350학급
 - ** ('19) 초 3~6학년 → ('20) 중·고등학교 → ('21) 초 1~2학년
- (탈북학생) 한국어 학습자료 보급('20.4), 1:1 멘토링(1,500명) 등 맞춤형 지원 및 찾아가는 전문상담단(50교, 80명)을 통한 진로·직업교육 강화
- (학업중단학생) 학교 내 대안교실 확대 등 학업중단 대응방안을 수립('20.上)하고, 학교 밖 학습을 통한 학업중단학생 학력 취득 기회 확대*
 - * 등록학습자 수 : ('18) 223명 → ('19) 653명 → ('20) 800명(목표)

□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 확대

- (유아)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('19. 22만원 → '20. 24만원)이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비 안정화* 추진
 - * 원비 인상 상한율('20. 1.3%)을 준수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 운영비 지원
- (교육급여) 다양한 교육활동을 반영한 지원항목 재구조화, 교육급여 보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'교육급여 개편방안' 수립('20.7)
 - 고등학생 부교재비 현실화(1.6배 인상) 및 교육급여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 최저보장수준 인상

- **(고교 무상교육)** 교육 기본권 실현,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**고2·3으로 확대 시행**(’20.3)
※ (’19.2학기) 고3 → (’20) 고2·3 → (’21) 전 학년 완성
- **(대학생)**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(2.2% → 2.0%), 상환기준소득 인상(2,080만원 → 2,174만원)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
 - 교내·외 **근로장학금*** (약 11.3만명) 및 **우수장학금**** (약 4천명)을 확대하고, 우수장학금 내 **전문기술인재 장학금**(1천명, 전문대 대상) 신설
* (’19) 2,874억원 → (’20) 3,282억원 / ** (’19) 197억원, 2,788명 → (’20) 368억원, 4,097명
- **(성인학습자)**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(’19. 5,000명 → ’20. 8,000명)

□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구현

- **(종합지원)** 학교 안팎 위험요인(통학, 재난, 안전사고 등)에 대한 체계적 관리·예방을 위해 ‘**학교안전 종합관리지원 방안**’ 마련(’20.下)
※ 유아~대학까지 안전보호 대상 및 보상범위 확대, 안전관리 지능화, 학교안전공제회 예방활동 확대 등 역할 강화 / 「학교안전법」 개정 등 후속조치(’20.下~)
- **(미세먼지)** 모든 교실 내 **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***(’20.2) 및 **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·보급**(’20.2)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
*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: (’17) 29% → (’18) 58% → (’19) 89%
 -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**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**(~’23, 과기부 협업)
- **(시설안전)**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**관련법령·관리체계 정비*** 및 **학교 내 유해요소(석면) 제거**(~’27)** 지속 추진
*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’20.12) 대비 관리체계 정비, 공청회·현장교육 실시, 법 해설집 및 홍보자료 제작·배포(’20.下)
** ’27년까지 매년 300만㎡ 석면제거 실시(’18. 1,519개교, ’19. 1,655개교 제거)
- **(학교폭력)** 예방교육*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, **학교장 자체해결제**(’19.9~)와 **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**(’20.3) 안착 지원**으로 학교의 교육적 역할 제고
* 초등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(어울림 프로그램) : (’19) 2,418개교 → (’20) 전체 초등학교
**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발(’20.1) 및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(’20.2~)

2 [혁신]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.

◇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,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 필요

☞ 학교 환경 조성 및 교육 방법·내용 혁신과 함께,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

1 미래 변화를 선도할 AI·첨단분야 인재양성

□ 초·중·고 AI교육 기반 조성

- (추진방향) '20년 SW교육 필수화 완료(초·중)와 동시에 AI교육으로 전환하여 모든 학생들이 AI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
- (교육내용) AI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능력 함양
 - 체계적인 AI교육을 위한 초·중·고 단계별 내용 기준(안) 마련

< AI교육 기준(안) >

- ❖ (기본방향) (초) 놀이·체험 중심, (중·고) 원리 이해를 통한 실생활 적용 중심
- ❖ (주요내용) AI 개념·원리의 이해·체험, 사회 현상의 공감·분석을 통한 문제 발굴, 데이터·통계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, 사회적 영향(윤리 포함) 등

- AI·SW를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*을 통해 다양한 교과 융합교육 기회 제공
 - * (예) 시각 장애인을 위한 'AI 얼굴 인식 초인종 프로그램' 개발('19. 부산컴퓨터과학고)
- (활성화 지원) 고교 AI 기초·융합 선택과목 신설('20) 및 적용('21)
 - SW교육 선도학교*,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('20. 34개교) 선정 등을 통해 AI교육 우수모델 발굴·확산
 - * SW교육 선도학교('20. 1,843개교) 중 10% 이상에서 AI 교육 시범실시 등
 - AI교육 기준(안)에 따른 다양한 교수·학습자료 및 콘텐츠 보급('20~)
- (교원 역량)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 전공 신설(연 1,000명) 및 AI 전문 연수* 등을 통해 현직교사의 AI융합교육 역량 강화
 - * SW교육 핵심 교원 연수(연 2,500명)를 AI교육으로 전환하고, 원격 연수 콘텐츠 보급('20)

□ AI·첨단분야 전문인재 집중 양성

- (학부) 인공지능, 바이오헬스 등 미래 첨단 21개 분야* 등과 관련한 학과 신·증설을 통해 인재 집중 양성

* D.N.A(Data, Network, AI) + BIG3(미래차, 바이오헬스, 시스템반도체) 등

- 첨단분야 융합학과(학부) 개설이 용이*하도록 규제 완화 및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·증설** 지원('20.上)

* 계열 간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,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 등

** ('20) 관계법령 개정 → ('21~)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
-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 융합전공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·방법·환경 혁신 지원('19. 20개교 → '20. 40개교)

- (석·박사) 4단계 BK21('20~'27) 사업 내 '혁신인재양성사업*(약 6,400명)'을 신설하여 첨단분야 우수 석·박사급 인재 양성

* 신산업(8대 핵심선도사업, 13대 혁신성장동력), 산업·사회문제 해결 연구인력 양성

□ 스마트 학교환경 조성

- (무선환경) SW교육, 디지털교과서, 온라인 협업학습 등 ICT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모든 초·중·고에 기가급 무선환경 구축

- '24년까지 전체 초·중·고등학교 교실에 무선망(Wi-fi) 설치 추진

※ '20. 초중학교 스마트기기(교당 최소 60개) 보급 및 초중고 무선AP(교당 최소 4개 교실) 설치 완료

- (디지털콘텐츠) 디지털교과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율개발·학교선택 방식으로 전환하고, 공공·민간 교육용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('20)

[AI 교육 종합방안 수립('20.下)]

- ❖ AI 교육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, 전 국민의 AI 기본소양 함양, AI 기술개발 인력 및 분야별 전문인력 등 양성방안 모색
- ❖ 빅데이터, AI 등 에듀테크(Edu-Tech)를 활용한 교수·학습 혁신 추진

2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 혁신

□ 미래교육 인프라 혁신

- (공간혁신) 학생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실단위 공간혁신 사업 확대 및 학교 공간 전면 재구조화 사업 개시
 - ※ 교실단위 : ('19) 450개교, 1,000억원 → ('20) 600개교, 1,500억원
 - 학교단위 : 50개교, 7,000억원 / ('20) 사전기획 → ('21) 설계 → ('22) 공사 → ('23.上) 구축
- 교육과정, 학교공간 등 학습환경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'핵심역량 기반 미래형 학교모델'을 정립·제시('20.7)
- (학교시설 복합화) 접근성이 높은 학교의 부지 및 유휴시설에 생활 SOC*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포용·상생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
 - * 보육·의료·복지·교통·문화·체육시설·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
- '20년 초·중·고 11개교(1,700억원) 추진 및 '21년 신규 수요 적극 발굴 등 사업 확대
- 근거법 제정,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·운영* 등 사업추진 기반 강화
 - * 추진단계별 전문기관 컨설팅(상시), 조례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 등

□ 교육혁신 주체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

- (전문성 강화)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생애단계별 연수 강화* 및 평가 개선, 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한 통합연수시스템** 개편('20~)
 - * 예시: (신규교사) 학교적응, 수업·상담역량 강화, (성장기)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 성찰·연구역량 강화, (발전기) 교직 발전경로 코칭 등
 - ** 교사의 관심분야를 고려한 연수과정 추천 등 AI 활용 통합연수정보시스템(중교연)
-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('20~)하여 교원의 성찰·역량 강화 등 연수의 실질적 효과 제고
- (양성과정) 수업 전문성 및 다교과 지도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교·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, 교육 실습기관 및 운영형태 다양화*
 - * 교원 학습 공동체, 교과연구회 등과 연계한 실습 계획 등까지 확대 검토
- 교대에 융합 또는 계열 전공제를 시범 도입('21)하고, 고교학점제 등에 대비하여 중등 예비교원의 복수전공 취득 요건 완화

□ 고교학점제 추진 및 일반고 역량 강화

- (종합계획)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'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' 수립('20.下)
 - ※ 미래 핵심역량 및 주제 중심 교육과정 개정방향, 과목 재구조화 방안, 관련법령 개정안, 학생 평가·졸업 제도 등 제시
- (직업계고) 고교학점제를 마이스터고 1학년부터 우선 도입('20.3~)하여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 모델 정립
 - ※ ('20)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→ ('22)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부분 도입 → ('25) 전체 고교 본격 시행
- (일반고)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*,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** 등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,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
 - * 전체 일반고 대상 '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지원 사업('20~'22)' 추진
 - ** ('20) 5개 내외 도(道)지역 우선 지원 → (~'24) 시(市)지역 등 단계적 확대
- 교과특성화학교('20. 311개교) 및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 확대*, 온·오프라인 공동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·확산
 - * 연구학교 : ('19) 102개교 → ('20) 128개교 / 선도학교 : ('19) 252개교 → ('20) 604개교
- 고교학점제 선도지구('20. 24개) 지원을 통해 학교- 시도교육청-지자체-지역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 및 고교교육 혁신

□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강화

- (민주시민교육) '19년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공통기준(안)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분석 및 민주시민 교육 현장 확산
 - ※ 학교 민주시민교육 원칙 발표('20.上) 및 민주적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민주학교 지원(약 200개교)
- 학생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한 선거교육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 교육활동 강화
 - ※ 토의·토론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 자료 개발·보급('20.8~)
- (미디어교육)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계* 구축 및 교과 연계형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수·학습자료 개발(~'21.2)
 - * 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추진('20~), 교사 연수 및 연구 지원,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

3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

□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

- (협업체계 구축)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다각적 협업의 장 마련 지원('20. 3개 지역 시범운영)

※ 대학, 지자체, 협업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'지역협업위원회'를 중심으로 협업체계 운영

- '지역혁신 핵심분야'를 발굴하고,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과제 수행 및 이를 지원하는 교육혁신* 추진

* 분야별로 대학 간 역할 분담 및 대학 내 학사구조·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

- (사업 간 연계) 지역 내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대학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

※ 예시 : (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) 부설 연구소를 갖춘 기업에 한해 R&D 수행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R&D 확대 곤란 ⇒ (지역혁신체계)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이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의 R&D를 지원



- (종합계획 수립) '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('21~'25)' 수립('20.下)을 통해 지역혁신 범부처 협력과제 발굴

※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목표, 지방대학 특성화, 지역인재 채용촉진 방향, 행·재정적 지원방안 제시

□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고급인력 양성

- (BK21) 4단계 BK21('20~'27)을 통해 석·박사급 연구인력(연 19,000명)에 대한 지원*을 확대하고, 대학본부 중심의 대학원 제도혁신 추진
 - * 지원규모(3단계 → 4단계) : 연 17,000명 → 19,000명 / 지원금 : (석사) 월 60만원 → 70만원 (박사) 월 100만원 → 130만원 (박사수료) 월 100만원 (신진연구인력) 월 250만원 → 300만원 이상
- (학문후속세대) 기초학문분야 우수 대학원생 연구장려금을 확대하고,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, 대학연구소 연구원 확충 등 연구일자리 창출
 - ※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확충('19. 150명 → '20. 450명), (가칭)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 도입('20. 3,300명),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및 이공대학중점연구소 사업('20. 2,800명)
- (대학연구소) 대학부설연구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학문분야별 세계적 수준의 핵심 대학연구소 육성 추진
- (연구윤리) 연구윤리 업무 지원 전담조직인 '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'를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
 - ※ 연구부정사건 조사 및 사후조치, 연구윤리 관련 정책지원, 교육 및 컨설팅 역할 수행

□ 미래 산업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

- (산학연계) 산업계 직무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협약반 등 혁신적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, 중소·중견기업 채용 연계
 - ※ 사회맞춤형학과('19. 1,028억원 → '20. 1,132억원) / 조기취업형 계약학과('19. 5개교 → '20. 8개교)
 - ※ 직업계고 - 전문대 교육과정을 통합한 AI 분야 계약학과 도입('21) 추진
- (취·창업 지원) 대학생이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 및 여건 등에 맞춰 체계적인 진로설계, 취업, 창업 등 지원
 - ※ 「대학생 사회진출 종합지원 방안」 수립('20.上)
- (마이스터대)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기반산업, 신산업 등 실무형 석사과정 운영이 가능한 '(가칭)마이스터대학' 도입 검토
 - ※ ('20) 제도도입 연구 → ('21) 시범운영 검토 → ('23) 법령 등 제도정비

□ 교육·연구 성과의 확산 제고

- (기업 지원) 대학 강점분야별 기업협업센터(ICC) 지원을 확대하여, 대학의 교육·연구성과 기반 인력양성-기술지원 연계 등 추진
 - ※ 기업협업센터 지원(LINC+ 산학협력 고도화형) : ('19) 172개 → ('20) 200개
- (기술이전·창업) 대학 간 기술 융·복합을 기반으로 우수기술 기업 이전 및 신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여 기술 활용에 기여
 - ※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: ('19) 18개교 → ('20) 24개교
 - ※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: ('19) 5개교 → ('20) 15개교
- (기반구축) 대학 유휴공간('20. 4개교) 및 부지를 활용한 산학연 간 융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-R&D-취업 등 연계 기반 구축

□ 글로벌 인적교류 촉진 및 교육한류 확산

- (인적교류) 신남방·신북방 등 전략국가 및 다문화 지역 학생·교사 간 교류*를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초청·유치 확대**
 - * 아세안+3 지역 학생교류('20. 1,200명) 및 다문화 지역 교사교류 확대('20. 190명)
 - ** 정부초청장학생 확대('19. 1,906명→'20. 2,400명) 및 아세안 지역 교수 초청 장학사업 신설
-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*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·관리 강화
 - * 어학연수과정 단독 평가, 언어능력 등 기준 강화, 우수 인증대학 신설 등
- (교육한류) 해외 한국어교육 기회 및 한국학 연구·교류*를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촉진, 국내외 교육기관 간 연계** 강화
 - * 한국학 DB 통합 플랫폼 구축('20. ISP수립→'21. 국내외 통합 한국학 자료 서비스 개통) 및 해외한국학 거점 전략연구소 신설('20. 1개소)
 - **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: ('19) 15개교 → ('20) 25개교
- 수요가 높은 신남방·신북방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채택*을 적극 지원하고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을 IBT 기반으로 개편(~'23)
 - * 해외 한국어 운영 학교수 : ('19) 1,590개교 → ('20) 1,764개교 → ('22) 2,000개교
- (기반 확충) 거점 지역에 한국교육원을 개원('20. 2개소)하고 국제협력 사업 추진체제(교육청·대학·연구기관 등) 정비 및 사업 간 연계 강화

◇ 교육 공정성 강화를 통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
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선결조건

☞ '19년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,
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

□ 서열화 된 고교체제 개편

○ (자사고·외고·국제고) '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에 맞춰 일반고로
일괄 전환하기 위해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등 개정(~'20.2)

※ 現 초4부터 적용, 일반고 전환 전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자사고 등 학생 신분 유지

- 자사고 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, 시·도교육청별
교육과정·평가·회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 지속

※ 시도교육청별 회계감사(정기, 수시), 교육과정 컨설팅 등 추진, 위반사항에 대해서는
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검토

-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·재정 지원*을 추진하여
'25년 전에도 자발적 전환 유도

* 3년 간 10억원 지원(시도별 추가 예산 마련 독려), 교과특성화학교·고교학점제 선도 학교 지정 등

○ (과학고·영재학교) 과다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
선발방식 개선방안 수립('20.上)

※ (예시)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,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, 과학고·
영재학교 지원시기 동일화 등 검토

□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

○ (대입전형 구조개편) 학종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
수능위주전형 확대* 권고 및 사회통합전형 법제화**

* 전형 간 균형을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%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
(16개교)에 '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%로 확대하되, '22학년도 조기 달성 유도

**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% 이상 의무화 및 수도권대학 지역균형 선발 10% 이상 권고

- (전형자료 공정성)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'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 기재 필수화*,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검증 강화**

* ('20)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(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사회, 과학) → ('21) 모든 과목

** NEIS에 학생부 기재 금지어 검증 솔루션 구축('20)

- (전형 운영 투명성)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 마련, 고교 및 학생 정보 블라인드 처리, 외부 공공 사정관 및 평가과정 외부인 참관 도입('21학년도~)

※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(719억원) 전면 개편을 통해 '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' 현장 안착 추진('20.2)

- 신입생 출신 고교유형(국제고·과학고·외고·일반고 등), 지역(특별시·광역시·중소도시·읍면),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평가결과 공시 확대*

* 「교육기관 정보공개법」 시행령 개정

□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을 위한 고졸 취업 및 후학습 지원 강화

- (교육 경쟁력 제고) 산업·학생 수요와 연계하여 학과개편을 지원(100개) 하고,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(200개교, '20.3~)을 통해 전반적 역량 강화 지원

- (안전한 현장실습) 학생 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실습기업에 현장 교사*를 지정·운영하고, 양질의 현장실습 선도기업 적극 발굴('20. 2만개)

*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2만개 기업에게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월 평균 50만원 지원

- 현장실습 참여지원금(월 60만원)을 신설하여 최저임금*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, 학교별 전담노무사 운영(365명)을 통해 학생 권익 보호

*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 30% + 기업에서 지급하는 수당 70%

- (원활한 취업 지원) 기업정보 발굴·공유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확대·배치('20. 600명)

- 공무원*·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등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 추진

* 국가직 지역인재 9급 : ('19) 10% → ('20) 13% / 지방직 9급 기술계고 : ('19) 23% → ('20) 25%

- (사회안착 및 역량개발 지원)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초기 사회안착을 위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* 확대 및 후학습 기회 확대**

* ('19) 3백만원, 25,500명 → ('20) 4백만원, 32,000명

** 국립대 후학습 전담과정 : ('19) 7개교 → ('20) 15개교 / 후학습 선도 전문대 : ('19) 15개교 → ('20) 25개교

□ 사학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

- (전담기구) 교육신뢰회복추진단*을 컨트롤타워로, 교육부 혁신, 교육현장 비리 근절 등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 중점 추진
 - *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, 교육비리 집중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('19.1~)
- (조사·감사)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(16개교)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(~'21)하고, 재정 운영 관련 실태점검('20. 40개교) 및 감리 강화
 - ※ 법인(299개) 감리 확대 계획 : ('18) 25개교 → ('19) 30개교 → ('20) 40개교
-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 기준 강화 및 유형별 적정 '감사처분 양정기준'을 마련('20.1)하고, 감사 결과 전문 공개*
 - * 종합감사, 회계감사, 특정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이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
- (제도개선)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과제('19.12, '사학혁신 추진방안') 중 행정 입법과제 우선 개정(~'20.6)
 -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및 당연 퇴임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회 등과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추진
- (공영형 사립대) 사학 운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*(~'20.6) 및 운영모델 개발('20.下)
 - * 책무성 확보방안 도입을 제안한 일반 사립대 선정, 교당 연구비 1.5억원 지원

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

- (교육복지 강화) 소외되는 계층 없이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(가칭)포용국가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방안' 수립('20.下)
 - ※ 교육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, 교육급여·교육비 개편, 교육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및 지역중심 지원 체계 강화, 법·제도 정비 등
- (교육 형평성 지표)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 우리 교육의 형평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
 - ※ (~'20.6)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→ ('20.7~9) 지표 체계 개발 → ('20.12) 데이터 수집 및 시범 조사·분석

4

(미래) 미래교육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.

◇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,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·선제적 대응 필요

☞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하여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 추진

□ 미래형 교육체제 기반 마련

○ (교원)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 종합대책 수립('20.下, '(가칭)교원정책 2030')

※ 교육 관련 유관기관,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추진

○ (교육과정)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'2022 개정 교육과정' 마련 착수

※ 개정방향(예시) : AI 교육 확대,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, 학점제 구현을 위한 공통·선택과목 재구조화,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등

○ (대입제도) 미래사회 역량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'28학년도 시행 예정인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 마련 착수

교육체제 혁신 로드맵



□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일-학습-삶 연계 강화

- (범정부 연계) 일자리-학습-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, 학습경험, 자격 등을 연계·통합한 범정부 평생학습체제 구축
 -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,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과 연계 추진
 - ※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('19.10)
 - 평생학습계좌제를 기반으로 부처별 교육·학습이력 연계*를 강화하고,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시스템** 구축 추진
 - * ('20.上) '평생학습계좌제', '늘배움' 등 ONE-ID 통합 시스템 구축 → 통합 시스템과 국가기술자격 연계 → ('21~) 시스템과 부처별 교육·학습이력 등을 연계
 - ** 국가·지자체가 보유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
 -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여, 학력-직무 능력-자격 등 다양한 영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체제 구축
- (일·학습 병행)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석사과정 확대, 역량학위제* 도입 등 검토
 - * (개념) 비학위 단기과정(3~6개월)을 이수한 일정 역량 보유자에게 대학의 장 명의의 이수증 수여 (활용) 복수의 역량학위를 조합하여 정식학위 취득, 취업 간 직무역량 증명자료로 제시 등

□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방향 마련

- (기본방향)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향 마련
 -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거시적 변화*에 초점을 맞추고 장·단기 과제 발굴, 교육 분야 대응 방안 마련
 - * 학령인구 감소, 고령인구 증가, 생산연령인구 감소, 지역사회 위기 등
- (추진방안) 교원, 재정 등 중장기 과제는 시도교육청, 국가교육회의 등과 협업하여 사회적 공론화 검토

□ 교육 거버넌스 개편

- (국가교육위원회) 중장기적 비전 하에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 수립·추진을 이끌어 나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속 추진
 -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
- (지방자치) 시·도교육청, 단위 학교로 유·초·중등교육 단계적 이양*을 통해 교육자치 실현
 - *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이양사무를 확정하고, 현장 안착 지원
 -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추진('20. 11개 지구)
 - ※ 기초지자체-교육(지원)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, 지구 내 학교 혁신 선도,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색사업 개발 및 내실화 지원
 - 지방교육 재정과 행정 시스템을 통합한 'K-에듀파인' 개통*('20.1~)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지원
 - ※ ('20.1) 교육특별회계·업무관리 → ('20.3) 학교회계 → ('20.6) 결산·통계

◇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시화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효과적 추진전략 필요

☞ 국민과의 소통, 부처 간 협업, 교육행정의 과학화,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해 확실한 제도개혁 추진

□ 국민체감형 현장소통 활성화

○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기 위해 ‘찾아가는 교육 정책 서비스’를 운영하고, 학부모 모니터단 확대(’20. 약 2,000명)

* 찾아가는 교육정책토론회, 토크콘서트, 현장 간담회 등

○ 주요 정책 발굴, 결정, 집행,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, 국민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참여제도* 확산

* (정책 발굴) 국민제안 → (정책결정) 전문가 토론회 → (정책 집행) 현장방문 및 현장 연구의 날 운영 → (평가 및 환류) 정책 국민투표, 우수사례 공모 등

- 주요 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

※ 부서 내 국민참여제도 우수사례 선정, 성과평가 반영 등 국민 참여의 질적 확대 도모

□ 범부처 사회정책 협업 강화

○ 관계부처, 전문가, 국회 간 논의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 안전과 직결된 핵심의제를 집중 발굴하고 이행관리

- 국민 체감도 높은 안건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

※ 정책관계자의 제안건의를 듣고 관계부처가 답하는 ‘(가칭)함께하는 사회정책’ 추진 등

< 3대 정책방향 및 핵심의제(안) >

- ❖ 기본생활 보장 : 돌봄 안심사회 구현, 사회적 약자 안전 확보, 국민건강 국가지원 강화
- ❖ 공정사회 실현 : 채용 공정성 확산, 교육 공정성 제고, 공정한 일터문화 조성
- ❖ 미래대비 혁신 : 지역혁신 기반 구축, 신산업 분야 혁신 촉진, 인생 2모작 지원

○ 정부 출범 3주년 계기 사회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역점 사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 추진(’20.上)

○ ‘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’ 개발(’20.12) 및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정책 추진역량 제고 지원

□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행정의 과학화

- (교육정보 연계·활용)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*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·추진
 - * NEIS, 교육기본통계,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, 교육재정, 정보공시 자료 등
-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(~'20.9)을 통해 시도교육청, 대학,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및 연계 분석 기반 마련
- (수요자 맞춤형 정책)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·학교별·학생별 분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활성화
 - 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데이터 3법 개정('20.1.9)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'가명정보'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단위의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 가능
- 교육데이터 유관기관 협의회를 확대·운영*하여 관계법령 개정,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 제반과제를 정비하고, 시범과제** 선정·분석 실시('20.下)
 - * (기존) KEDI, KERIS 등 유관기관 → (확대) 시도교육청, 전문가 등 추가
 - ** (예시) 학생 등하교길 안전,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응 등
- 향후, 복지부·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정책 발굴 및 개선 추진

□ 고등교육 규제 혁신

- 고등교육분야 규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'고등교육 규제 혁신방안'을 수립('20.上)하고,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 추진

< 고등교육 규제혁신방안 주요내용(안) >

- ❖ (기존 규제)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를 중심으로 필요성 재검토
- ❖ (신규규제 사전심사) 새로운 규제 신설시 별도 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타당성 확인
- ❖ (규제 일몰제) 신설규제에 대하여도 3년 기준으로 자동 폐지, 존속 필요성 검토

- 대학, 학계,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구축하여 현장의견에 기반한 고등교육 중장기 발전방향* 및 재정 확충 방안** 등 논의
 - * '교육부-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' 지속 운영('19.2~) 및 대학, 학계,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'(가칭)고등교육 정책 포럼' 신설·운영('20.上)
 - ** 대학협의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'(가칭)고등교육재정위원회' 구성·운영('20.上)
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

유치원 3법 시행	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전면도입	국공립유치원 확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교비회계 목적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☑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법적 근거 마련 ☑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	 <p>'19 1,320개원 '20 모든 사립유치원 3,801개원</p>	 <p>500학급 이상 확충 매입형, 조합형, 공영형 등 국공립유치원 다양화</p>

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

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	온종일 돌봄 강화	등하교 안전 확보
 <p>읽기, 쓰기, 셈하기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쉽·놀이가 가능한 교실 전국 50% 이상 구축 목표</p>	 <p>돌봄서비스 제공 '19 39.7만명 '20 42.5만명</p>	 <p>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2,087대 신호등 2,146개 우선설치</p>

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

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	고교 무상교육 확대	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
 <p>22만원 → 24만원 '19 '20</p>	 <p>고3 → 고2, 고3 '19, 2학기 '20</p>	 <p>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'19 2.2% → '20 2.0% 상환기준소득 인상 '19 2,080만원 → '20 2,174만원</p>

■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를 혁신하겠습니다

스마트 학교환경 구축	학교 공간 혁신	고교학점제 추진	AI 교육기반 조성
<p>전체 초·중고 교실 기가급 무선환경 구축 (~'24)</p> <p>전체 초·중고 교당 4개 교실 무선 AP 구축('20)</p> 	<p>교실 450개교 → 600개교 '19 '20</p> <p>학교 50개교, 7,000억원</p>	<p>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'20</p> <p>특성화고 전면도입 일반고 부분 도입 '22</p>	 <p>초·중·고 SW교육 필수화 완료 AI교육 기반 조성</p>

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

지역혁신체계 구축	4단계 BK21('20~'27)	사회 맞춤형 학과 지원
<p>지자체 대학 연계·협업 지역산업체 연구기관 등</p> <p>3개 지역, 1,080억원</p>	<p>석박사생 지원 17,000명 → 19,000명</p> <p>석사 월 60 → 70만원 박사 월 100 → 130만원 신진연구원 월 250 → 300만원</p>	 <p>1,028억원 457개 학과 1,132억원 497개 학과 '19 '20</p>

■ 공정한 교육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

대입제도공정성 강화	고졸 취업 지원
<p>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'22학년도 30% 이상</p> <p>서울 소재 대학 일부(16개교)는 '23학년도까지 40% 이상</p> <p>사회통합전형 10% 이상 의무화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선발 10% 이상 권고</p>	<p>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최저임금 보장</p> <p>국가 30% 지원 (월 60만원) 기업 70% 지원</p> <p>고졸 취업 연계 장려금 확대 25,500명 3백만원 32,000명 4백만원 지원 '19 '20</p>